

연구제안서 [1]

제목: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의 70%가 산림이므로 현재와 같이 선진국형의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하려면 식량의 완전 자급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쌀의 자급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이를 성취하였으며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며 역사에 남을 우리 농업계의 큰 공로이다. 그러나 쌀의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여 전체 곡물 소비량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곡물자급률은 전년도의 26%에서 22%로 하락할 전망이다.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구내용:

- (1) 쌀의 자급과 MMA에 의한 쌀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대처 방안 연구
- (2) 식용콩의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비용 산출
- (3) 기초사료의 부분 자급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도의 개발과 운용 방안
- (4)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방법에 관한 연구
- (5) 국산 식량자원의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연구방법:

- (1) 연구팀 구성: 연구책임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공동연구자 - 문헌팔(한국종자포럼)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이숙종 박사, 이꽃임 박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2) 연구기간: 2013년 1월 - 12월(1년 과제)
- (3) 연구비: 3,000만원
-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3년 10월

기대효과:

- (1)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2)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타당성을 확보한다.
- (3) 세계무역기구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도출한다.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연구제안서 [2]

제목: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추진배경: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 위해분석에 의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비용손실이 일어나고 식품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통조림 포르말린사건, 불량만두사건, 라면의 벤조피렌사건 등 비과학적인 식품행정으로 식품산업이 도산하고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년 초에는 생굴의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해 미국에 수출된 굴 생산품들이 모두 회수되고 수입 금지를 당해 굴 가공업자들이 줄도산하고 한국 식품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땅에 떨어졌다.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곤두박질치는 허약한 식품행정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관련 기업들은 사기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행정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내용:

- (1) 최근에 일어난 주요 식품위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 (2) 미국의 FDA현대화법 시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 현황 분석
- (3)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
- (4)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 (5) 식품행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연구방법:

- (1) 외부용역 - 연구팀 공개모집
- (2) 연구기간: 2013년 1월 - 12월 (1년 과제)
- (3) 연구비: 2,000만원 (토론회 비용 포함)
-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3년 6월

기대효과:

- (1)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 하여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 (2)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한다.
- (3) 식품행정의 불안요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개선책을 도모한다.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연구제안서 [3]

제목: 식량비축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추진배경: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바이오연료 생산의 확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에 의한 폭발적인 동물성식품 소비 증대로 세계의 식량 공급구조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과 앞으로 심화될 세계 식량부족 사태를 감지한 각 나라들이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수출을 제한하고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양곡관리법 제 10조에 미곡의 비축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곡물이나 식량의 비축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눈앞에 닥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내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하고 적정수준의 식량비축을 법제화해야 한다. 쌀의 비축량을 비상시(통일 등)에 충분한 양으로 늘리고, 미곡 이외의 주요 곡물(콩, 밀, 옥수수, 보리 등)에 대한 비축량을 정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정 비축량 산출과 비축 방법, 소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내용:

- (1) 통일을 대비한 쌀의 적정 비축량 산출과 이행 방법
- (2) 콩의 적정 비축량 산출과 이행 방법
- (3) 기타 식량의 비축량 산출과 이행 방법
- (4) 국제 선물거래시장을 이용한 비축 방안
- (5) 식량 비축제 확대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조달 방안

연구방법:

- (1) 외부용역 - 연구팀 공개모집
- (2) 연구기간: 2013년 1월 - 12월 (1년 과제)
- (3) 연구비: 2,000만원 (토론회 비용 포함)
-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3년 8월

기대효과:

- (1) 식량비축제 확대를 위한 입법화 자료를 제공한다.
- (2) 식량비축에 정부와 민간 기업(식품산업)이 공조하는 새로운 비축개념을 개발한다.
- (3) 식량비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